

# 지역경제및중소상인살리기 광명네트워크 출범선언문

오늘 광명지역의 12개 상인단체와 시민단체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풀뿌리 지역경제가 고사위기에 놓여있는 현실 때문이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풀뿌리 경제위기에 대해 미국 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세계 경제의 침체 때문이라고 강변해서는 안 된다. 풀뿌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들의 쇠퇴는 1996년 이후 정부의 준비 없는 소매시장 개방정책에서 비롯되었다. 이로 인한 대형마트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최근 대형마트 계열사인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골목마다 진출해 중소기업자들의 몰락을 부추기고 있다.

대형마트 주변의 기존 상점들이 고사하면서 지역수입이 줄고, 지방자치단체는 훨씬 많은 공공서비스와 교통체증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더구나 이들이 얻은 수입은 지역은행에 예치되거나 지역사업에 투자되지 않고, 본사로 바로 빠져 나가고 있다. 대형마트로 일자리 1개가 생길 때마다, 오히려 사라지는 일자리는 1.5개에 이른다고 한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출점 및 영업 활동에 대한 사회적 규제 장치가 불가피하다. 환경과 교통에 대한 영향평가를 보다 엄격히 실시하고, 지역 상권에 대한 영향평가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대형유통업체는 스스로 무분별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출점을 즉각 중단하고, 대형마트와 중소기업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신용카드 수수료의 차별이 시정되어야 한다. 신용카드는 국민들이 현금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결제 수단이며, 신용카드 공제를 통해 자영업자 소득과약과 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합리적인 수수료와 부가 서비스 비용의 소비자 전가 등 가맹점과 카드사 그리고 소비자의 관계가 시장경제 질서와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동네 골목에 있는 음식점, 미용실, 서점, 자동차정비업소 등은 규모가 크고 협상력이 있는 대형마트, 백화점, 골프장 보다 2배에 이르는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여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해야 한다.

대규모 자본의 공세로 인해 고사 직전인 재래시장과 중소자영업자들에게 그 어떠한 사회적 안전망도 존재하지 않는다. 자영업자들은 고용보험 대상이 아니어서 폐업을 해도 이들의 소득을 보완해줄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자영업자들의 폐업은 곧 빈곤층으로의 전락을 의미할 수밖에 없다. 일정 소득기준이하의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폐업 시 실업수당을 지원하도록 하고, 전업에 필요한 교육 등의 각종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한편 광명의 중소상인들이 밀집해 있는 재래시장을 살리고 육성하는 일에 지방정부가 나서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명시는 재래시장을 뉴타운 사업에 포함시켜 고사시키려고 한다. 불과 몇 년 전 9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광명시장과 새마을시장 리모델링을 하면서 광명시는 재래시장의 육성을 공언했었다.

하지만 광명동 일대의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며 광명시는 기존의 입장을 바꾸었고, 재래시장 존치에 대해 상인들과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사업구역에 포함시킴으로 재래시장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뉴타운 사업이 과연 광명시민들을 위한 사업이라면 생존권을 위협하고, 광명시에서 시민들을 쫓아내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공공시설물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용적률을 높이 받을 수 있는 재래시장의 상인들을 희생시키는 것이 뉴타운 사업의 본질인가를 묻고 싶다. 평생의 직장을 잃고 권리금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야 할 운명에 처한 상인들의 처지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플뿌리 경제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핵심이다. 우리는 지역에 기반한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잘 알고 있다.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해서는 그에 걸 맞는 권한과 이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고 경제적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생산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우선 우리 헌법이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성장 및 안정’ 등 공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인정하고 있다. 18대 국회에는 대형마트 규제와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 중소상인들을 살리기 위한 수많은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다. 이러한 민생법안의 통과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의지를 보여야 한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합리적 규제 장치를 마련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을 제한하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차별을 없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한시적으로라도 자영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직업교육훈련과 창

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들이 전제되어야 풀뿌리 경제를 지속 가능한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지역경제및중소상인살리기 광명네트워크를 출범하면서 지난 5월 19일 전국의 140여개 단체(2009년8월24일 201개 단체)가 모여 결성한 중소기업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와 뜻을 같이하여 일할 것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1) 균형 있는 지역경제의 육성을 위해 재래시장 및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책 마련을 촉구한다. 특히 ▲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합리적 규제 ▲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인하 ▲ 중소기업에 대한 실업안정망 구축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 2) 상기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 제정 및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위해 시와 시의회가 앞장서야 한다.
- 3) 재건축, 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 시 재래시장이 존치되도록 노력하고, 재래시장상인 및 중소기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육성책을 마련하라
- 4)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광명시민 일자리 창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2009. 9. 8

## **지역경제및중소상인살리기 광명네트워크**

(광명시슈퍼마켓협동조합, 광명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광명새마을시장상인조합, 광명경실련, 광명교육연대, 광명만남의집,  
광명여성의전화, 광명YMCA, 광명NCC, iCOOP광명생협,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광명시지부, 전국민주공무원노조광명시지부)